

하남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05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년 3월 일

발 의 자 : 정 병 용 의원

1. 제안이유

본 조례안은 「하남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」를 전부 개정하여 조례의 명칭을 「하남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·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하고, 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 및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, 하남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민족정기를 선양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명을 ‘하남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·지원에 관한 조례’로 변경
- 나.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(안 제2조)
- 다. 시장의 독립운동 정신 계승 및 독립유공자 예우·지원 시책 추진 책무를 명시(안 제3조)
- 라. 독립운동 기념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사업 위탁 근거를 마련함(안 제4조)
- 마.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에 대한 예우·지원 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(안 제5조)
- 바. 지원 대상자를 하남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으로 한정하고, 국가보훈부의 지원 부적격자는 제외함(안 제6조)
- 사. 지원 중단, 환수 및 환수 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(안 제7조)
- 아. 기념사업 및 예우·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(안 제8조)
- 자. 매년 3월 27일을 ‘하남시 독립유공자의 날’로 지정(안 제9조)
- 차. 하남시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(안 제10조)

3. 개정조례안: 덧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서: 덧붙임

5. 신·구조문 대비표: 해당없음

하남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「하남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」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하남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·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남시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 선양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독립유공자”란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.
2. “유족 등”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하남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·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.

제4조(기념사업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.

1. 독립유공자 추모사업
2. 독립운동 유적지 정비 및 기념시설 설치
3. 독립운동 관련 자료 수집·보존·관리·전시 및 조사·연구
4.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·학술·문화사업
5. 그 밖에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독립운동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5조(독립유공자 예우·지원 사업)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의 예우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다만,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이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.

1.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독립유공자수당 지급

2. 삭제

3. 생존 독립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지급

4. 명절 및 관련 기념일 등에 위로금 또는 위문품 지급

5. 그 밖에 시장이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(지원 대상자)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으로서 현재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. 다만,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한다.

제7조(지원중단 및 환수)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환수하여야 한다.

1.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

2. 법 제6조의2에 따른 신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

3. 법 제39조에 따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경우

4. 지원대상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

5. 그 밖에 시장이 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를 취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지원을 받은 후 그 지원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, 그 지원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라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.

제8조(예산지원) ① 시장은 제4조와 제5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은 「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.

제9조(독립유공자의 날) 매년 3월 27일을 하남시 독립유공자의 날로 정한다.

제10조(유공자 포상) 시장은 하남시 독립유공자에 대하여 「하남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4조(적용 대상자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.

1. 순국선열: 일제의 국권침탈(國權侵奪)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, 그 공로로 건국훈장(建國勳章)·건국포장(建國褒章)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
2. 애국지사: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, 그 공로로 건국훈장·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

제5조(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)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배우자
 2. 자녀
 3. 손자녀(孫子女). 다만,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.
 4.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
-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,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. 다만,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독립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.
-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, 양자(養子)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(直系卑屬)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본다. 다만,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,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(直系尊卑屬)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.
- ④ 제1항제3호의 손자녀의 경우, 독립유공자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손자녀로 본다. 다만,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,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.
- ⑤ 제1항제4호의 며느리의 경우, 제12조에 따른 보상금(報償金)을 받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, 해당자가 2명 이상이면 그 남편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(先順位者) 1명으로 한정한다.

제39조(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)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

적용받을 독립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.

1. 「국가보안법」의 위반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
2. 「형법」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,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
3. 독립운동 공적(功績)에 중대한 흠결(欠缺)이 있다고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자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

가. 「형법」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, 제264조의 죄,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,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,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, 제297조, 제297조의2,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, 제301조의2, 제302조,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, 제332조의 죄(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) 또는 그 미수죄,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,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·제338조 전단·제339조의 미수죄,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, 제351조(제347조, 제347조의2, 제348조, 제350조,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)의 죄 또는 그 미수죄, 제363조의 죄

나.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「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, 제3조제3항 및 제6조(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)의 죄

다.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, 제5조의2,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

라. 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의 죄

마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(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)의 죄

바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,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

사. 「군사기밀 보호법」 제11조, 제11조의2, 제12조, 제13조,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

아.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

5.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
6. 「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자
7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,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,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
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제1

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.

③ (생략)

④ (생략)

⑤ (생략)